

# 세계화와 한국사회

이 상 철

## 1. 머리말

요즈음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은 '세계화'이다. 그것은 김대통령이 이 말을 강제 유포시켰기 때문이다. 약 1년 전인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후 김대통령에 의해 갑자기 나온 '세계화'는 국정의 지표가 되면서 큰 힘을 얻었다. 이미 전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던 한국의 독점대자본은 이에 적극 화답함으로써 세계화는 날개를 단 격이 되었다.

출생이 갑작스러웠던 만큼 이 말은 사용하는 자에 따라 그 의미가 가지각색이지만 논의의 경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실로서의 세계화를, 다른 하나는 이상으로서의 세계화를 주로 다루거나 강조하는 경향들이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향들은 각각 정치경제적 측면에 치중하거나 경쟁논리를 강조하는 것, 사회문화적 측면에 치중하거나 공존논리를 강조하는 것과 친화성(親和性)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전자의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면서 후자의 측면을 보완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혼란을 정리하고 세계화의 의미를 그 기초에서부터 다시 점검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세계화의 의미

세계화란 기본적으로 자본의 논리이며 자본의 운동을 지칭한다. 자본

은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구속도 벗어나고자 한다. 국가 경계가 자본축적에 도움이 되면 자본은 국가범주 안에 머물거나 국가의 기능을 이용한다. 국가범주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즉 자본의 목적추구에 장애가 되면 자본은 이 경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자본이 이러한 장애를 벗어나거나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세계화 현상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본의 순환 - 화폐자본, 상품자본, 생산자본 등의 형태전환과 운동 - 이 일국의 경계를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국제화이고, 관계되는 국가 범위가 광범위할 때는 세계화가 된다.

자본주의 역사는 자본의 세계화원리에 따라 자본주의가 전세계적 규모로 확대전개되어온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크게 세번의 팽창기를 거쳐왔다. 제1차 팽창기는 자본주의 발생 이후 지리상의 대발견에서 중상주의를 거쳐 산업혁명에 이르는 시기이다. 제2차 팽창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식민지 쟁탈전이 전개되었던 제국주의 시기이다. 경쟁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바뀌었고, 각국의 자본이 원료와 시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식민지를 확대하고 더욱 철저하게 장악하였다. 제3차 팽창기는 1970년대 초 아랍과 이스라엘간 전쟁의 결과로 발생한 석유충격(Oil Shock) 때부터 현재 현재까지 세계 일국 단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한 단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다. 현실사회주의는 붕괴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면서 새롭게 3극체제 - 미국, 일본, 유럽 특히 독일 세 집단이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는 체제 - 가 도래하였다. 선발자본주의국간의 경쟁도 격화되었다. 특히 사회주의의 붕괴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쇠퇴시키고 자본주의의 견제세력을 없애면서, 자본간의 경쟁을 노골화·전면화시켜 무한경쟁이란 말을 실감나게 하였다. 초국적기업이 경제주체가 된 이 시기를 특별히 지칭하여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화는 자본의 운동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팽창기의 자본축적양식은 테일러주의(Taylorism)의 과학적 관리론을 계승한 포드주의(Fordism)로 귀결되었다. 제3

차 팽창(세계화)은 포드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산체계가 지배적인 축적양식으로 변화해온 것에 기인한다. 이 변화는 과학기술혁명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한 분야는 극소전자(ME, Micro-Electronics), 생명공학(Biotechnology), 신소재(Materials Science) 등이다.

이 중에서 극소전자혁명은 컴퓨터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첨단기술 전체를 복합시키고 통합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물적(기술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정보·통신·교통(Computer Science, Tele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발전의 근거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교통 발전에 의해 자본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대폭 극복되고 세계화의 주체인 초국적기업은 세계경제를 ‘세계화’시킬 수 있었다.

세계화는 경제현상에 기초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경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은 일국의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거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간 협력기구를 형성하려는 정치적 시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계적 차원에서의 통합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모색 중이고 진통 중일 뿐이다. 진통은 한편 세계화와 공동의 규칙이 강조되고, 다른 한편 국민경제간 경쟁과 마찰이 증대되면서 국가경쟁력이 얘기되는 모순적 현상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모순적 현상은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지방화가 진행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결국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현상이면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를 파악하는 입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는 것으로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간 지배가 강화되고 종속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두 관점에는 모두 일면적 진실이 있으면서 한계도 있다. 따라서 상호의존과 지배-종속 중 어느 면이 지배적이 되는가는 선형적으로 결정되었다기보다 우리의 구체적 행위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화를 파악하는 두가지 관점이 있는 것처럼 세계화에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 경쟁은 현실로서의 세계화를, 협력과 공존은 이상으로서의 세계화를 주로 고찰한 것이다. 실제로 세계화는 자본의 운동에 의해 추동되어왔기 때문에 세계화에는 정치경제적 힘에 의한 경쟁관계가 주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화의 상호협력적 측면은 그동안 대체로 간과되어 왔다. 이 측면은 지구공동체 및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라는 이상으로서의 세계화와 주로 관계된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치경제적 측면보다 사회문화적 측면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목소리가 미약하다.

### 3. 자본주의 팽창기의 한국

자본주의의 제1차 팽창 때 우리는 국제적 관계망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19세기 중반이후 서양에서 관계수립을 요구해오기 시작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제2차 팽창이 시작될 때 고립주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식민지로 전락했다. 지속되어온 쇠국주의는 우리를 우물안의 개구리로 만들어 세계정세의 변화를 보지 못하게 했다. 소중화(小中華) 사상은 우리의 바깥을 멀시하도록 해 현실을 직시할 수 없게 했다. 농민이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혁명운동은 기득권층과 수구파의 완강한 저항과 외세의존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현실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을 외면한 우리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해는 그 결과가 잘못된 점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맞이했던 해방공간에서도 나타났다. 미소, 나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에 따른 세계정세변화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우리는 외세에 의해 또다시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아야 했다. 지금은 제3차 팽창이 전개되고 있는 세계사적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의 전환기도 겹친 중차대한 시기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자본주의는 지금 앞뒤로 장애에 부딪쳐 있다. 앞에는 선발국의

기술이전 회피와 시장개방 등 제반 압력이 있고, 뒤에는 우리보다 산업화에서 한발 늦은 개도국이 추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독재체제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도기이다. 민주화가 더욱 빠르고 확고하게 진행되면 우리는 세계추세에 그만큼 적응하기가 쉽게 되고, 그 반대면 또다시 탈락할 가능성이 큰 시점이다. 국제정세에서도 냉전이 종식되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통일을 달성하기가 좋은 시기이다. 이 기회를 놓쳐 분단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면 중심부로의 진입이나 국제무대에서의 독자적 위상정립이 상당기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금은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여 반주변부와 중심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분단과 통일의 제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호기이다. 즉 세계사적 전환기와 한국사의 전환기가 겹침으로써 우리는 지금 위기와 기회를 같이 맞고 있다.

#### 4.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현실

세계화의 영향과 현상은 우리 한국사회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를 우리 경제계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세계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로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본, 특히 독점대자본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세계화는 국가, 국민일반 및 노동에 대해 전개되고 있다. 국가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모든 것을 시장기제에 맡기라는 요구에서 잘 나타난다. 국가개입은 시장기제를 왜곡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독점대자본은 세계화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아야 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은 한국에도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자본(기업)의 이익과 국가·국민의 이익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 '활동에 간섭하거나 발목을 잡지말고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이윤을 보다 많이 획득하여 경쟁력도 제고시키며,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노

동에 대해서도 이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그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면 기업에 나쁘고 노동에게도 나쁘며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본과 노동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다면서 노동의 이해를 자본의 이해에 강제 귀속시키고자 한다. 결국 세계화와 무한경쟁 시대의 주인공은 자본이고, 자본의 이익이 곧 국가·국민·노동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에서 자본의 헤게모니 강화에 기여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우리의 현실은 세계화추세나 세계적 수준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하다. 김대통령이 세계화를 들고나온 것도 우리 정치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과거와는 달리 헤게모니 없는 ‘물리적 통제’를 구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 신한국건설·변화와 개혁·신경제 등의 구호효과가 약화된 것이다. 새로운 구호의 필요성 때문에 국제화를 얘기하고 또다시 세계화까지 제시하게 된 것이다. 셋째, 냉전 해체후 ‘반공’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큰 이데올로기 효과를 가지지 못하므로, ‘북한’이라는 대상 대신에 새로운 ‘적’(敵)을 찾아야 국내의 내적 통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적은 곧 무한경쟁의 냉혹한 ‘세계’이다. 이 세계를 향해 앞장서서 뛰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력을 낭비하는 행위로 비난받게 된다.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야당 활동과 사회운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동원하며, 문민정부 이전 특히 6공과의 단절(차별성) 효과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세계화구호는 언술적 차원에서 현정권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국민동원을 의도한 ‘의사’헤게모니적 지배 시도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세계화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겨냥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술에서는 ‘세계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에서는 정반대의 경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의미의 세계화는 사회문화에서도 쌍방간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보편성 속에서 특수성이 꽃피는 문

화국제주의를 의미할 터인데도, 우리는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반대인 뒤틀린 현상은 ‘세계화’를 이데올로기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게 한다. 여기에서 세계화를 내세우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깥’을 보라면서 내적인 통합을 겨냥한 것이다. 밖을 강조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호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도는 우리가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은 세계화시대에는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불어 사는 것을 강조해야 할텐데, 반대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단일민족임을 자랑하고 타민족을 멸시하는 태도를 조장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삶의 질’이 국가경쟁력의 기초이므로 삶의 질을 세계화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최하위수준이다. 노동자를 배제하는 ‘두개의 국민전략’은 언술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결국 세계화구호는 현정권의 출범초기에 제시되었던 ‘민주화’구호를 잠재우고, 국가경쟁력 강화구호는 ‘변화와 개혁’구호를 약화시킨다. 우리 ‘외부’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내부’를 소홀하게 해서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게 하거나 외부문제로써 호도한다. ‘세계화’는 수구논리로서 지배 이데올로기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겉으로는 변화, 새시대 적용과 세계진출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그 반대의 효과를 갖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화추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 5. 맺음말 : 올바른 인식과 대응

구호로서의 세계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세계화가 현재 한국사회 담론에서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 또는 이데올로기와는 관계 없이 세계사적 추세에 전국민이 대응하는 자세는 긴요하다. 왜냐하면 세계화 구호가 완전한 허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엄연히 현시

기의 세계사적 흐름이므로 우리는 이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대응은 무엇보다도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여 우리의 근대적 과제를 완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대내적으로는 '민주', 대외적으로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정립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문제는 계급계층간, 지역간, 기업 규모간 등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민족의 문제는 통일의 길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 길은 남북간 화해와 공존을 시작하여, 협력으로 나아가고, 다시 통일로 도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수행될 때에만 우리는 전국민적 차원에서 힘을 결집하여 세계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계화구호로써 근대적 과제를 호도하거나 완결하지 않으면 그 세계화는 허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세계화 속에 통일민족국가의 과제를 소멸시키거나 방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근대적 과제를 냉전체제가 아닌 세계화 속에 포괄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기여하여 진보성을 담지하고 국제정치에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 우리가 통일민족국가를 이루는 과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긴장과 갈등 완화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국제정치에서 냉전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고, 해양·대륙세력간 및 자본주의·사회주의세력간의 완충·조정 장치로 기능하며, 중간자적 입장에서 선후발국간 중간조정 또는 매개역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중간자적 위치는 세계경제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거나, 우리의 수준에 맞는 기술, 중위의 기술을 계속 개발하여 이전함으로써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위상도 높일 수 있다.

세계화추세에 대한 현실적 대응은 세계화를 자본과 국가가 지배이데올로기로만 활용하지 않도록 이들을 전국민이 비판하고 견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민주화와 개혁을 적극 요구함으로써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주화와 개혁이 전제되어야만 한국사회의 제측면에서 근대성과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만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이 가능하고, 삶의 질도 높아지며, 전국민적 결집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화와 개혁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참된 기초이다. 둘째, 세계화 담론을 역이용해야 한다.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운동을 지칭하는 경제적 현상이므로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의적 사용과 혼란이 이루어진 요즈음에는, 세계화 구호를 무시하거나 능가하는 구호를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역학관계에서 이를 역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비판하거나 냉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리의 역이용은 국내적으로는 ‘참된’ 세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자본의 경쟁논리 외 사회문화 중심의 협력적 측면도 같이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자본과 국가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전국민, 특히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주체로 나서야 한다. 시민부문단체와 운동, 노동단체와 운동 등이 주체로 나설 때, 세계화구호의 남용·오용이 방지되고 전국민적 차원에서의 동원과 힘결집도 가능하다. 시민사회의 적극 대응을 국제적 차원에서도 전개하여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한 세계 시민과 노동자의 협력도 유도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세계화추세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계로 향하고, 세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측면과,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측면을 같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 바, 대내적 균열을 극복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평화를 심는 것이다. 분단된 우리에게는 민족적 차원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적극적 기여를 하는 것이다. 가치로서의 세계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 정치경제적 측면의 경쟁논리 외에 인류의 이상인 공존과 협력논리로서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적극적 대응자세 외에, 더불어 살려는 자세, 보편성 속의 특수성 추구 자세에서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인식과 자세를 추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세계화라는 말을 의미있게 이용하는 길일 것이다.